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4년 2월 3주차 (2014.2.6. ~ 2.20)

요약(Summary)

1. 의료발전협의회(의정협의회) 합의

(1) 의-정, 원격의료 합의(2/18) / (2) 보건노조, 의정 협의결과에 반발(2/18) / (3) 의정 협의체 결과 놓고 의협-병협 '온도차'(2/19) / (4) 의협, 총파업 시작 시기 3월 10일로 일주일 미뤄(2/19) / (5) 노환규 비대위원장 사퇴, 이용진 부회장 사의(2/20) / (6) 보건계약 3단체, 의정합의 비판(2/18)

2.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발표

(1) 문형표 "선택진료 폐지 병원계 손실 100% 보전"(2/11) / (2) 3대 비급여 개선 병행 '민간보험료 인하' 제기(2/15)

3. 의료민영화 관련

(1) "의료법인 부대사업, 화장품·건식 제외 검토"(2/6) / (2) 박근혜,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일자리 창출"(2/19) / (3) 의료소외계층 앞세워 '원격의료 도입 절실' 분위기 조성(2/18) / (4) 김용익 의원, 대정부 질문서 시범사업 결과 조작의혹 제기(2/12)

○ 기타뉴스

- 건보 보장률 하락세...비급여 본인부담 늘어(2/6)
- 건강보험 흑자,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2/20)
- 해외환자 100만 유치 선언...첫 의료휴양 호텔 오픈(2/9)
-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학병원 의사 50명 파견 배치(2/10)
- 의료민영화 정책론자 정기택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공모 지원(2/13)
- 민간보험사 정보 유출, 금감원과 MOU한 공단에 불뚱?(2/14)
- 한국 의료관광, 중국인 1위·미국·일본은 감소 추세(2/18)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비용 공개 확대(2/17)
- 안연케어,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2/12)
- 삼성 제외 한국 의료기기 실적 둔화(2/19)
- 원광대병원, 양한방병원 통합 이어 산본 치과병원 폐업(2/20)
- 시장형실거래가 폐지키로...외래처방 장려금제로 전환(2/14)
- 중구·종로구 등 5개 구의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2/7)
- 심평원 노사 갈등, 결국 천막농성(2/14)
- 병원간호사회, 간호사 이직률 16.9%(2/18)

1. 의료발전협의회(의정협의회) 합의

(1) 의-정, 원격의료 합의(2/18)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졌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계 반대로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가 5차례 회의를 거쳐 원격의료 국회 논의를 합의했다.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은 원격진료 및 처방 등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권덕철 정책관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협의회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의료계를 위한 당근을 내놓기도 했다. 우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특히 앞으로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 존중과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의협이 제안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향후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하여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¹⁾

(2) 보건노조, 의정 협의결과에 반발(2/18)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협의결과를 놓고 의료영리화 저지 공조체계를 구축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자칫 이번 의정협의 결과로 인해 6개 보건의료단체간 공조체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6차례 개최해 도출해낸 합의내용은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다.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보건의료노조도 의협과 공조를 유지하는 것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6개단체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에 반대키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공조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무작정 공조체계를 깨려는 생각은 아니다. 협의결과를 놓고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²⁾

(3) 의정 협의체 결과 놓고 의협-병협 '온도차'(2/19)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반면 병원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병원협회와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병원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병협 측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과 같은 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의료수가가 현실화 돼야 한다"며 "이번 협의 결과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³⁾

(4) 의협, 총파업 시작 시기 3월 10일로 일주일 미뤄(2/19)

의사협회가 오는 3월 3일로 예정했던 의료계 총파업 개시 시기를 같은 달 10일로 일주일 정도 미루기로 했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대한 찬반 및 총파업 찬반 투표도 이달 21일로 이틀 늦췄다. 의협은 19일 노환규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총파업 돌입이 3월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의정협의를 지체되어 총파업 관련 전 회원 투표 종료일이 27일이 됨에 따라 지나치게 날짜가 촉박해 부득이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⁴⁾

(5) 노환규 비대위원장 사퇴, 이용진 부회장 사퇴(2/20)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노 회장은 18일 "지난 17일 열린 제14차 비대위 회의를 끝으로 의협 비대위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의협 기획부회장이자 이번 대정부 협상을 이끌었던 이용진 협상단 간사도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 사표가 받아들여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노환규 회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이용진 부회장은 당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였던 노환규 회장과 호흡을 같이해오다 노 회장의 회장 당선과 함께 제37대 집행부에 합류했다. 특히 이번 대정부 협상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임수흡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과 함께 협상단으로 활약하며 제5차 의료발전협의회 회의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협상단이 도출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둘러싸고 노환규 회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와 예고된 총과업 일정까지 동시에 제동이 걸리며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⁵⁾

(6) 보건의약 3단체, 의정합의 비판(2/18)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가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원격진료 및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 정부와 의협간 협의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 3개 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협간 '원격진료 입법' 합의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가 논의 등은 '밑실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해 치협, 한의협, 약사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음에도 이번 합의 과정에서 건보수가 인상이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3개 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발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⁶⁾

2.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발표

(1) 문형표 "선택진료 폐지 병원계 손실 100% 보전"(2/11)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병원계 손실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그 방법으로 수가 조정과 신설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가진 후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병원계 설득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병원들 수익도 감안하고 있다"면서 "수익 악화 추세인 병원계를 위해 환자 부담 경감과 동시에 병원들 손실을 100%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수가를 조정해주고 신설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고도 전문적 수술처치 기능검사 등 수가 인상(3,500억원)과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1,600억원) 등 5,100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5년과 2016년에는 환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조정(1,200억원)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5,000억원),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500억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2017년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역시 3,500억원 규모로 병원들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는 구상이다.⁷⁾

(2) 3대 비급여 개선 병행 '민간보험료 인하' 제기(2/15)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실행에 있어 민간보험료 인하가 변수로 떠올랐다. 김용익 의원 등 민주당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시 강력한 문제제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익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그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보험료 인하 동시 추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의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의 범위로 끌어안으면 그간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오던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낮아지게 된다. 낮아지는 지급률만큼 민간보험사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셈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는 77%의 국민 입장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인상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첫 단추를 낄 때부터 국민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용익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보험료를 인하시지 않으면 3대 비급여 개선안이 보험 재정을 민간보험사에 갖다 바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의료보험회사는 때돈을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 보험료 인하와 동시 추진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써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⁸⁾

3. 의료민영화 관련

(1) "의료법인 부대사업, 화장품·건식 제외 검토"(2/6)

병원계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당초 복지부가 예로 제시했던 화장품과 건식을 부대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환자에 상품을 강매하는 등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당국자는 5일 오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국자에 따르면 당초 작년 12월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의료법인이나 자법인 부대사업으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등이 구체적 예로 제시됐다. 정부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예로 들었기 때문에 병원들 경영수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장품과 건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 당국자는 화장품과 건식을 부대사업에 포함시킬 지 제외시킬 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과 건식 제조업이나 판매업은 만약 부대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임대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박순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제 3자에 점포를 임대하는 방식의 은행업과 화장품, 건식은 부대사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⁹⁾

(2) 박근혜,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일자리 창출"(2/19)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자법인 설립이 환자 편의와 의료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이는 자법인 설립을 놓고 야당과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자법인 설립에 대해 "서비스가 더욱 전문화돼 그 질을 개선하면 환자 편의가 좋아진다"며 "의료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이런 정책까지 발목을 잡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소모적인 논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안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치밀하고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런 인식하에 소관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¹⁰⁾

(3) 의료소외계층 앞세워 '원격의료 도입 절실' 분위기 조성 여당(2/18)

새누리당이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 소외계층의 원격의료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선 원격의료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줄을 이었다.

토론회에는 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을 필두로 남경필, 문정림, 박명제, 신의진, 이자스민, 류지영, 이만우, 손인춘, 김희국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자리하고, 황우여 당대표가 축전을 보낼 정도로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관심이 뜨거웠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창준 보건료정책과장이 발제자로 나선 데 이어,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자리했다.

토론회는 새누리당과 정부 인사들의 기대를 부응하듯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여타 토론회들과는 달리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원격진료 도입의 의료서비스 확대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들은 감기약 하나 (처방)받기 위해 휠체어 타거나 업혀서 가야한다"며 "이동하면서 감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원격의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동네의료 중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한 이창준 과장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선(先) 원격의료 시행 후(後)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 계획'의 뜻을 재차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정부는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료소외계층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 더 충실한 편리한 의료 제공코자 원격의

료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대부분의 패널들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 한국적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등 장애인 단체 패널들은 모두 동네의원의 장애인 접근성과 신뢰 부족 등을 지적하며 원격의료로 장애인들이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중 회장은 “유형별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과 교도소,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엔 원격의료 필요하다. 하지만 만성질환에선 장점도 일부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 만성질환은 환자관리가 중요한데, 지금도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는 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¹¹⁾

(4) 김용익 의원, 대정부 질문서 시범사업 결과 조작의혹 제기(2/12)

지난해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만 고의적으로 확대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시간에 이같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발표 중 원격의료와 대면진료 효과를 비교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관리 중 비만관리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산자부의 보도자료에는 원격의료로 전 분야에서 효과적인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임상시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연구가 원격의료 시 각종 기기를 활용할 수 있거나 간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대부분의 만성질환자에게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자부의 연구는 원격의료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격医료를 어떻게든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산자부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산자부 시범사업 결과는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근간에 차이가 없으며, 원격의료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원격医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부분은 다른 서비스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로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후 생겨날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도 해보지 않았음에도 원격의료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원격의료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계산해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 장관은 “원격의료의 기본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효과를 추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¹²⁾

1. 건보 보장률 하락세...비급여 본인부담 늘어(2/6)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81개 기관을 상대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 63%보다 0.5%p 하락했다. 법정본인부담률은 20.3%로 같은 기간보다 0.3%p 높아졌으며,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7.2%로 0.2%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별로는 일반검사료·주사료·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상급병실 차액과 선택진료비 비율은 감소했다. 법정본인부담률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 비중의 증가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	65	63.6	63	62.5
법정본인 부담률	21.9	21.3	20.6	20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	15.5	13.7	15.8	17	17.2

▲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건보 보장률에 비해 2012년 기준 4대 중증질환자의 건보 보장률은 전년도보다 1.7% 늘어난 77.8%로 나타났다. 암 환자가 총 1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그 가운데 77만 8000원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고, 나머지 22만 2000원은 환자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했다는 의미다. 실제 4대 중증질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은 2011년 6.6%에서 2012년 6.2%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17.3%에서 16%로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다.

2012년도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1년 75.5%보다 1.9% 증가한 77.4%로 늘었다.¹³⁾

2. 건강보험 흑자,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2/20)

건보재정 누적 흑자 6조원을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흑자분은 재정위기에 대비한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곳간 사수에 나섰다.

20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건강보험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난해 누적흑자는 5조5721억원이나 2008년부터 보험료수입 증가율(9.6%)이 보험급여비 증가율(8.7%)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유래없는 흑자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들의 재정 사용처에 대한 동상이몽이 목격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보장성 확대에, 의료계는 수가 인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흑자 재정분을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현 연구원은 못박았다.

현 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1조원대, 2020년 7조원, 2030년 29조원, 2040년에는 무려 48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흑자분은 건보법 제38조 준비금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급여비의 5%이상을 적립해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고,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급여비,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연구원은 "불과 몇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함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안정적 재정운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¹⁴⁾

의료 산업

1. 해외환자 100만 유치 선언...첫 의료휴양 호텔 오픈(2/9)

오는 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융복합 의료관광 모델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와 휴양을 결합한 한국형 메디컬리조트가 처음으로 제주에서 오픈했다. 최초 한국형 의료+휴양 결합모델인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 호텔' 개장식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9일 제주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환자 유치의 일대 도약(퀀텀점프)을 위해 의료와 휴양을 접목한 한국의료 이용모델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한국을 찾는 해외환자는 매년 큰 폭 증가폭을 보여 2013년에는 180개국 약 20만명(추정, 실환자)의 외국인이 한국 의료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작년(1~11월) 건강관련 여행수지가 1억 70만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가 최고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지난 2012년 연환자 47만5,000명으로, 아직은 주요 경쟁국인 태국과 싱가포르 등에 유치 인원이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한국'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이미지와 진료와 결합된 건강관리, 관광, 휴양인프라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우리 의료기술에 다양한 관광, 휴양인프라, 이용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한국 의료+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복지부도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역 의료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모델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와 휴양을 결합한 한국형 의료관광 모델이 최초로 개발된 올해를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2020년)를 위한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향후, 오는 2020년 100만명 유치 시 진료 및 관광수익으로 2조9,000억원을 벌고 5만,4000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동안 국내 의료관광을 선도해온 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이 3년여 준비에 설립한 WE호텔은 청정 제주의 대표적 천연자원인 물을 이용한 메디컬 스파와 천연림을 이용한 산림테라피 등 제주 특성을 활용한 자연치료요법으로 의료와 휴양이 필요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The WE호텔'의 진료, 건강검진, 휴양 등의 융·복합 프로그램은 복지부의 작년 예산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 실용화됐다.¹⁵⁾

2.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학병원 의사 50명 파견 배치(2/10)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50명을 파견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사인력 수급이 어렵고, 공중보건의사 의존율이 높지만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양질의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 돼 왔다. 실제로 100명당 의사인력 수를 보면 종합병원은 17.5명 수준인데 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11.13명으로, 그나마 공보의를 제외하면 8.3명 수준에 불과하다. 33개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중 공보의 비중은 17.5%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료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인력 교류협약(MOU) 체결 후 의사를 파견받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에 한정해 매년 5명 내외의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올해부터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경쟁력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지원 의사를 50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지원대상 기관도 확대했다.

복지부는 각 대학병원과 협력해 의사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지방의료원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13개 의료원에 25명의 의사인력을 1차 지원키로 했다.¹⁶⁾

3. 의료민영화 정책론자 정기택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공모 지원(2/13)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경희대 정기택 교수가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6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에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선정 고대의대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론자로 분류되는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지원

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정 교수가 공모지원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기택 교수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확대, 원격의료 허용, 네트워크치과의원 활성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산업화 등을 주장해왔다. 특히 정 부여당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론자이자 새누리당 의료민영화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될 경우 의료민영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보건산업 육성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힘을 쏟을 진흥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의료민영화론자인 정 교수를 진흥원장으로 임명하면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정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해명 역시 대국민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¹⁷⁾

4. 민간보험사 정보 유출, 금감원과 MOU한 공단에 불뚱?(2/14)

카드사와 민간보험사 등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문제로 정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정보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까지 불뚱이 튀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이 기업 내부 전산정보를 제3자인 미국 본사 감사팀에게 무단으로 열람을 허용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개인정보 관리 불철저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번엔 논란이 된 푸르덴셜생명의 개인정보 관리 불철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반 금융사가 아니라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로서, 단순한 보험료 납입여부 등에 대한 조회를 넘어선 정보유출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가입자들의 보험 정보에는 질병, 수술 내역, 사고 현황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어 정보유출이 확인될 경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를 포함해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과 보험료 지급거부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재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개인정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 질병정보가 집적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정보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한, 막대한 개인질병 정보가 집적돼 있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¹⁸⁾

5. 한국 의료관광, 중국인 1위·미국·일본은 감소 추세(2/18)

한국 의료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중국인'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그동안 1, 2위를 다투던 미국과 일본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료 이용 외국인 환자는 2012년 한 해 동안 188개국, 15만9464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2673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2011년도보다 환자 수 30.4%, 진료수익 47.8%가 증가한 것이다.

2012년 외국인 환자를 주요 국적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순으로 '중국인 환자'가 극적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 환자가 미국인 환자(19.2%)를 누르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주목되는 점이다. 중국인 환자는 전년도보다 69.1% 늘어난 3만2503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의 20.4%를 차지했다. 본래 중국인 환자는 2009년 4724명으로 전체의 7.8%에 불과했으나 3년간 연평균 90.2%씩 7배 가까이 급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몽골(157.4%), 카자흐스탄(123.1%), 아랍에미리트(116.5%) 역시 2011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 환자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미국 환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 11.1%로, 환자수는 실제적으로 증가했지만 비중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일본 환자는 전년대비 12.2% 감소해 국적별 비중은 18.4%에서 6%p 하락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영향은 진료과에서도 드러났다. 2012년 진료과별로 보면, 내과,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한의과, 안과 순으로 5개 주요 진료과의 편중 현상이 완화된 모습이다. 여기서 성형외과는 중국 환자의 지속적 유입으로 증가한 반면, 한의과는 일본 환자의 급감으로 감소했다. 피부과는 일본 환자의 증감과 상관없이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¹⁹⁾

6.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비용 공개 확대(2/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공개는 지난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6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9월에는 MRI 등 4대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다.

현재 심평원이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당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이다.

이로써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 수는 기존에 공개 중인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을 합쳐 153개 기관이 됐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²⁰⁾

7. 안연케어,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2/12)

연세재단이 자회사인 의약품 유통업체 안연케어(구.제중상사)의 지분 51%를 대기업 계열사에 매각한다. 12일 의약품 유통업체와 아이마켓코리아에 따르면 연세재단이 10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안연케어의 지분 51%를 750억원에 아이마켓코리아로 인계한다. 매각금액은 750억원이며, 향후 13년간 독점 납품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연케어의 지난 2012년 매출이 2279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마켓코리아는 앞으로 13년 동안 3조원대의 의약품을 연세의료원에 독점 납품하게 되는 것이다.

안연케어는 1992년 설립돼 연세대학교 재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되는 원내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불공정 사례로 지적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각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4월 연세재단은 매각 입찰을 진행, 1150억원을 제시한 신성약품을 1순위, 아이마켓을 2순위, 남양약품과 부림약품, 지오영 등을 각각 3~5순위로 선정했지만 아이마켓코리아와 최종 손을 잡았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인터파크 계열 회사로 산업자재 등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2012년 매출이 2조455억원이다. 과거 아이마켓코리아는 삼성전자와 삼성계열사의 지분이 58.7%였고 이후 인터파크 등에 지분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외 계열사의 지분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마켓코리아가 안연케어의 지분을 인수한 것을 대자본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²¹⁾

8. 삼성 제외 한국 의료기기 실적 둔화(2/19)

의료기기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서서히 둔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낮아진 반면,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는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는 ‘2013년 3분기 국내 의료기기 상장기업 (26개 기업) 경영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 의료기기 상장기업 26곳의 매출액은 1조1311억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4.3%, 제조업 매출액은 9872억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단 0.9%에 그쳤다. 전년 동기(5.2%) 대비 4.3%p나 하락한 수치다.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도 6.8%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6%p 낮아졌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국내 법인기업의 성장성·수익성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3년 3분기 의료기기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04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3.0% 증가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9.2%로 전년동기 6.1% 대비 3.1%p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됐다. 하지만 삼성메디슨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679억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7.3%로 1.9%p나 낮아진다.

기업경영 분석의 주요지표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다. ‘성장성’은 매출액 및 총자

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등의 세부지표를 통해 파악된다. 보고서는 “성장성 지표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인데, 실제로 의료기기 상장기업은 영업이익 감소와 판매관리비 증가 등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²²⁾

9. 원광대병원, 양·한방병원 통합 이어 산본 치과병원 폐업(2/20)

양·한방 통합 암병원 설립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원광대병원이 산본치과병원 폐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앞서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1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양·한방 통합 암병원 설립 및 산본치과병원 폐업이 담긴 대학 안 10개 병원 구조조정에 착수한 바 있다. 원광학원은 한방병원 5곳을 포함해 전국에 계열 병원 10곳을 현재 운영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본 치과병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폐업을 결정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광대 산본병원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컨설팅을 받은 후 이사진이 내린 결정”이라며 “병원도 해당 결정을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²³⁾

약계 뉴스

1. 시장형실거래가 폐지키로...외래처방 장려금제로 전환(2/14)

지난 1일부터 재시행에 들어간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율 50% 하향 조정 보완안 ▲외래처방 장려금제도 확대 대체안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체 구성원간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협의체는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확대하는 대체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체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빠르면 7월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함께 구체적 대체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중론이 단일안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복수안 상정시 협의체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사실상 시장형실거래가 폐지안이 단일안으로 상정됨에 따라 오는 3월말로 예정된 협의체 운영기간까지 참여를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²⁴⁾

1. 중구·종로구 등 5개 구의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2/7)

서울 중구와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의회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진동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5개 구의회는 7일 국립중앙의료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진동 이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까지 도심권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고 취약계층, 의료급여환자 등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는데 원진동으로 이전하면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무책임하게 165억원의 예산 편성을 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의료원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개 구의회는 앞으로 '5개 자치구의회 공동협의체'를 꾸리고 구별로 주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 1일 2014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165억여원을 편성했다.²⁵⁾

2. 심평원 노사 갈등, 결국 천막농성(2/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동조합이 올해 들어 개최된 세번째 교섭자리가 모두 파행으로 치닫자,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 본원 1층 로비에는 노동조합이 마련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천막에는 '단체협약 개악 반대한다 노사합의 지켜라'라는 현수막이 노조의 뜻을 대변했다.

이번 노조의 천막농성은 심평원장이 취임한지 약 열흘만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주목된다. 노조 측은 현재 교섭팀을 교체하는 것과, 신임 손명세 심평원장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었다. 심평원 노조는 이번 무기한 단식농성에도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쟁의조정기간의 절차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²⁶⁾

3. 병원간호사회, 간호사 이직률 16.9%(2/18)

간호사 이직률이 16.9%에 달하며 병원 규모가 작고 병상수가 적을수록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2년 취업한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전체보다 2배가량 높은 31.2%였다. 이는 최근 병원간호사회가 196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을 실태조사 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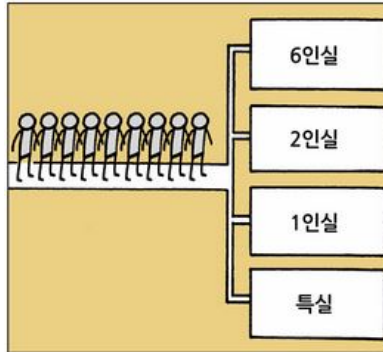
이직 간호사들을 병상 규모별로 분석하면 규모가 작은 곳에서 간호사들 이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직자 중 200병상 미만인 곳에 속한 간호사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0~399병상 20.3%, 400~599병상 17.9%, 600~799병상 13.3%, 800~999병상은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병상 이상의 규모에서 이직률은 7.9%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흐름대로 의료기관별 이직률 역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이직률은 전체 9.4%에 불과하지만 종합병원은 19.1%, 병원 18.9%, 요양병원 19.9%로 10%이상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사유로는 보다 좋은 근무조건을 찾기 위해 '타 병원 이직'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출산 및 육아'가 15.9% '업무 부적응'이 13% 순이었다.

이직자 대부분은 일반간호사(95.1%)였으며, 책임(주임)간호사는 2.8%, 수간호사는 1.3%, 간호관리자 0.8%로 높은 직책을 맡을수록 이직이 적었다.²⁷⁾

1. 웹툰 '아프니까 병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적용이 되어 저렴한 6인실(다인실)을 원한다.

그러다보니 경쟁이 치열한 6인실은 늘 부족한 편이라서 빈 자리가 없을 경우 2인실이나 1인실로 배정받게 된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2인실, 1인실, 특실 등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 1) '의-정, 원격의료 합의...의료법 개정안 3월 국회로', 2014.2.18., <데일리팜>
- 2) '보건노조, 의정 협의결과에 반발...잡은 손 놓을까 말까', 2014.2.18., <라포르시안>
- 3) '의정 협의체 결과 놓고 의협-병협 '온도차', 2014.2.20., <데일리메디>
- 4) '의협, 총과업 시작 시기 3월 10일로 일주일 미뤄', 2014.2.19., <라포르시안>
- 5) '노환규 의협회장 최측근 이용진 부회장도 사표', 2014.2.20., <데일리메디>
- 6) '보건계약 3단계, 의-정 협의 강력 규탄...`밀실야합`', 2014.2.18., <메디파나뉴스>
- 7) '문형표 "선택 진료 폐지 병원계 손실 100% 보전"', 2014.2.11., <메디파나뉴스>
- 8) '3대 비급여 개선 병행 '민간보험료 인하' 제기', 2014.2.15., <데일리메디>
- 9) "'의료법인 부대사업, 화장품·건설 제외 검토"', 2014.2.6., <메디파나뉴스>
- 10) '박 대통령 "의료법인 자법인, 일자리 창출"', 2014.2.19., <데일리메디>
- 11) "'원격의료 도입 절실'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여당', 2014.2.18., <청년 의사>
- 12) "'산자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조작됐다'", 2014.2.12., <청년 의사>
- 13) '건보 보장률 하락세...비급여 본인부담 늘어', 2014.2.6., <청년 의사>
- 14) "'혹자 6조? 탐내지마"...공단 세미나 열고 공간 '사수'", 2014.2.20., <메디파나뉴스>
- 15) '해외환자 100만 유치 선언...첫 의료휴양 호텔 오픈', 2014.2.9., <메디파나뉴스>
- 16)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학병원 의사 50명 파견 배치', 2014.2.10., <라포르시안>
- 17) '의협-치협 이어 보건노조 "정기택 교수 진흥원장 지원 철회" 촉구', 2014.2.13., <쿠키뉴스>
- 18) '민간보험사 정보 유출, 금감원과 MOU한 공단에 불똥?', 2014.2.14., <메디파나뉴스>
- 19) '한국 의료관광, 중국인 1위...미국·일본은 감소 추세', 2014.2.18., <메디파나뉴스>
- 20)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비용 공개 확대', 2014.2.17., <라포르시안>
- 21) '연세의료원 도매상→대기업에 750억 매각', 2014.2.12., <데일리메디>
- 22) '삼성 제외 한국 의료기기 실적 '거품'', 2014.2.19., <데일리메디>
- 23) '양·한방 통합 시킬 원광대병원 설상가상 치과까지', 2014.2.20., <데일리메디>
- 24) '시장형실거래가 폐지키로...외래처방 장려금제로 전환', 2014.2.14., <라포르시안>
- 25) '중구·종로구 등 5개 구의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2014.2.7., <라포르시안>
- 26) '심평원 노사 갈등, 결국 천막농성으로...위원장 단식', 2014.2.14., <메디파나뉴스>
- 27) '간호사 이직률 16.9%...신참 31% 떠나', 2014.2.18., <데일리메디>